

중앙SUNDAY

PRINT PAGE

Print

## 오바마 '低 CO<sub>2</sub>후진국' 벗고 재생에너지 제국 꿈꾼다

미국

김한영&lt;whanyung@joongang.co.kr&gt; | 제88호 | 20081115 입력



버락 오바마가 10월 8일 뉴햄프셔 포츠머스에서 자신의 에너지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에너지 위기에 봉착한 미국이 2030년까지 해외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35% 축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블룸버그

미국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내세운 녹색 성장 공약은 그가 당선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해 녹색 일자리 500만 개를 창출한다는 장밋빛 공약이었다. 오바마 후보의 에너지 공약에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이미 시작된 정책이 확대·

### 관련기사

유가 떨어지는 지금이 인프라 구축 적기  
10조원 규모 '그린 뉴딜' 나온다  
기름 한 방울도 안 쓰고 난방비 절반으로 줄여

변형된 것도 포함됐다. 하지만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월스트리트 금융위기라는 직격탄을 맞기 전에 재생에너지 분야는 고속 성장을 거듭했다. 2008년 3분기에 재생에너지가 포함된 청정기술 부문에 대한 벤처자본 투자는 16억 달러에 달했다. 2007년 같은 기간에 비해 55% 성장한 것이다. 오바마 선거 캠프는 이러한 흐름을 포착해 적절하게 이용했다. 대선 결과가 확인

되자 에너지 부문은 희비가 엇갈렸다. 석유산업 등 전통 에너지 부문은 한숨을 내쉬었고, 세계 혜택을 기대하는 바이오연료·풍력·태양광발전 관련 기업들은 환호했다.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오바마 행정부에 급한 불은 금융 위기지만 최우선 정책과제는 녹색성장 추진이다. 선거 공약대로 경제 운영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재생에너지 경제'를 건설한다는 야심 찬 계획이 이미 짜였다. 새로운 경제체제에서는 화이트칼라·블루칼라 일자리가 아니라 그린칼라 일자리가 고용 창출의 핵심이 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상응하는 환경·에너지 정부기관인 에너지안전보장회의(ESC)를 백악관에 신설한다는 관측도 워싱턴 정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집권 초반에는 불가피하게 월스트리트 금융위기와 에너지 정책이 연계된다. 우선 500억 달러를 에너지 분야에 투입해 2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금융위기로 구제가 필요한 자동차 회사들에는 250억 달러를 대부하고 40억 달러의 세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그 대신 자동차 회사들은 연간 최소 4%씩 자동차 연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사용될 첨단 배터리 기술에도 투자해야 한다.

급한 불을 끄고 나면 중·장기 에너지 계획을 추진한다. 수력발전을 포함해 현재 8%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12년까지 10%, 2025년까지 25%로 늘릴 계획이다. '그린 인프라 펀드'를 조성해 공공건물과 개인 주택에 대한 고효율 에너지 개량사업에는 세제 혜택을 준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책과도 결정적으로 결별한다. 민주당 정권인수위 공동의장인 존 포데스타 미국진보센터(CAP) 소장은 오바마 취임 즉시 환경보호국(EPA)에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위해 GDP 1% 투자

규모의 경제 필요 ... 몇 개 회사가 세계시장 지배할 것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25만 개 일자리 시장규모만 44조원

선진국 녹색투자 경쟁 전략적 '거품' 만든다



녹색 투자와 관련해 비외른 롬보르 코펜하겐 경영대 교수(왼쪽)는 신중성과 효율성을, 토머스 프리드먼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오른쪽)는 혁명적인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교토의정서는 2012년 만료되며 코펜하겐 의정서가 내년에 채택돼 환경의 미래를 40년 이상 좌우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에 비해 훨씬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 문제와 환경 문제는 밀착돼 있으나 별개다. 현재 분석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탄소 배출 축소를 위한 환경법안보다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법안 통과에 치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정도와 원인에 대한 오랜 논란은 친환경·친녹색성장 성향의 오바마 행정부를 맞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녹색성장이 미국 국가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쟁점이 등장했다.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L 프리드먼과 비외른 롬보르 덴마크 코펜하겐 경영대 교수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우선 뉴욕 타임스의 간판스타인 프리드먼은 최근 '뜨겁고 판판하고 붐비는 지구: 녹색혁명은 필요한가 그리고 녹색혁명은 어떻게 미국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가'라는 저서를 출간했다. 책의 내용은 오바마의 녹색 구상과 딱 들어맞는다. 프리드먼은 미국이 9·11 테러 이후 방향 감각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청정에너지, 에너지 효율, 환경보전에 집중하는 녹색혁명으로 현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친환경 에너지 개발로 미국의 새로운 부흥이 가능하다고 역설한다. 녹색전략은 국력을 창출하는 새로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는 에너지·기후 시대(Energy-Climate Era)가 도래했으며 정보기술(IT) 시대를 넘어 환경기술(ET) 시대가 시작됐다고 분석한다. 무엇보다 녹색혁명이 필요한 이유는 2050년이 지나면 환경재앙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외른 롬보르는 프리드먼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이다. 롬보르도 지구온난화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며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프리드먼이 예상하는 정도의 환경 파국은 없다고 주장한다. 롬보르에 따르면 프리드먼은 무엇보다도 녹색 성장의 비용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손익계산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롬보르는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하지만 '뚝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롬보르는 '사이비 녹색혁명'을 경계한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 속에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진행하는 비효율적 투자가 바로 사이비 녹색혁명이다. 효율성은 롬보르가 펴는 논지의 핵심이다. 그는 녹색혁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고라는 주장의 허구성을 폭로한다. 녹색부문이 아니라 그 어떤 분야라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대량 창출된다는 것이다.

#### 오바마의 녹색 성장 로드맵 핵심 목표

핵심 목표	
고용 증대	녹색 일자리 500만 개 창출
목표 달성 수단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 투자
대체에너지	
비중 증대	2012년까지 전력 수요의 10% 2025년까지 전력 수요의 25%
바이오연료	2030년 바이오연료 생산량: 600억 갤런
에너지 효율성	
전력 수요 축소	에너지 효율성 증대로 2020년 예상 전력 수요의 15% 감소
자동차산업	
자동차 연비 개선	매년 4%씩 연비 증가 국내 자동차 회사 연비 개선 사업에 40억 달러 지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갤런당 최대 150마일 주행 수입보다 국내 생산에 의존 구매 시 최대 7000달러 세금 공제
탄소 배출 감소	
국가저탄소연료 표준(LCFS)	2020년까지 연료 탄소 배출량 10% 감소
청정 석탄 기술	청정 석탄 발전소 5개 건설
배출총량거래제(cap-and-trade system) 도입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80% 감소

프리트먼은 유럽의 녹색 정책을 긍정적으로 본다. 석유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미국과 달리 유럽은 대체에너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감탄한다. 반면 덴마크인인 롬보르는 유럽의 대체에너지 정책이 알려진 것과 같은 성공작은 아니라고 본다. 대표적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독일과 덴마크도 비효율성의 사례일 뿐이다. 예컨대 독일은 2035년까지 태양전지판 분야에 1560억 달러를 지출한다. 그러나 그 결과 세기말까지 지구온난화를 단지 한 시간 늦출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생산되는 풍력발전용 터빈의 3분의 1을 생산하는 덴마크도 덴마크경제협의회에서 조사한 결과 터빈 생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었다.

오바마는 1500억 달러를 에너지 부문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고 공언해 왔다. 롬보르는 '전략적'이라는 말에 '효율적'이라는 뜻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유한다. 기후변화 대처는 좋지만 정부와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서로 밀착돼 비효율적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롬보르가 오바마 정부에 거는 기대는 크다. 그는 오바마가 주도해 세계 각국이 에너지 기술에 국내총생산(GDP)의 0.05%를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토의정서보다 10배나 덜 든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와 조 비덴의 이름으로 발표한 '미국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에는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재생에너지 문제를 일차적으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석유에 대한 의존은 우선 국가안보를 저해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이차적이다. 오바마 행정부도 녹색성장을 세계 전략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다. 과거와 달리 기후·에너지 분야를 주도하겠다고 나서는 미국은 기후변화 대처와 재생에너지를 국제관계에서 타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Print

Copyright by sunday.joins.com, Inc.